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2. 6.(금) 16:00

행정안전부, 충남·대전 행정통합 성공을 위한 ‘격의 없는 소통의 장’ 마련

- 2월 6일(금), 행정안전부 장관-대전시장-충남지사 간담회 개최
-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재정지원 등 지역사회 요구사항 의견 청취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월 6일(금) 오후 4시,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,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,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한자리에 모여 ‘충남·대전 행정통합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.
-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, 성공적인 시·도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,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먼저,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지원 기반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.
- 또한,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상이한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.
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란 점”을 강조하며,
- “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·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으며, 실질적인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“나아가,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‘선통합, 후보완’이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양 단체장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범정부 차원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대외협력과	책임자	과 장	유윤수 (044-205-3631)
		담당자	사무관	권혜은 (044-205-3633)

